

JB Weekly Web Magazine

| 2025.09.25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01	한·미 상호관세협상 속 슬쩍 끼어든 구글발 '디지털 통상'	p.1
02	식약처, K-화장품 최대 수출국 중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 개최	p.4
03	9월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3주간 72% 업체 참여	p.5
04	관세청·KOTRA 맞손 잡고 중소기업 미 관세 대응 지원	p.6
05	수입식품 검사명령, 베트남 7개 제조업소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 신규 지정	p.7

1 한·미 상호관세협상 속 슬쩍 끼어든 구글발 '디지털 통상'

디지털 통상, 무역 넘어 경제 안보 과제로 ... 국제 협력 플랫폼 수립 필요

지난 9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유럽연합(EU) 간 제5차 디지털 통상협정(DTA)이 개최됐다.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기존 한·EU FTA에 전자상거래 관련 2개 조항만 포함돼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자 한·EU간 디지털 통상 규범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작년 10월 통상협정 개시선언 후 4차례 개최됐다.

디지털 통상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상품·서비스 무역에서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등 새로운 거래 대상과 방식이 등장하면서 관련 규범과 협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통상이다.

정부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이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양국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전 세계 최대 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은 미국정부를 앞세워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구글의 입장을 대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통상 문제는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및 망 사용료 부과 등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되기 전인 7월 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제가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이 추진 중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구글, 쿠팡 등 미국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1 한·미 상호관세협상 속 슬쩍 끼어든 구글발 ‘디지털 통상’

디지털 통상, 무역 넘어 경제 안보 과제로 ... 국제 협력 플랫폼 수립 필요

구글은 최근 우리 정부의 요구인 국가 보안시설의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이 가능한데도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인연합회는 9월 17일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세미나를 열고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디지털 통상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통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경제 안보와 국가 전략이 맞물린 핵심 과제”라며,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정밀 지도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모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세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미국발 통상 압력 속에서 산업계의 경쟁력과 실익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특히 디지털 통상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서울시립대 이주형 로스쿨 교수는 ‘디지털 통상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로 자국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EU 사례에서 보듯 잠재적 위협을 넘어 현실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이 미·EU 협상 경험에서 나타난 표준의 상호인정과 사이버보안 인증협상 사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협력 플랫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 한·미 상호관세협상 속 슬쩍 끼어든 구글발 '디지털 통상'

디지털 통상, 무역 넘어 경제 안보 과제로 ... 국제 협력 플랫폼 수립 필요

한·미 디지털통상협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미국의 요구사항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미국은 데이터 자유 이동과 현지화 금지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플랫폼 규제법을 통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9월 18일,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양국 대표가 국제행사 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지, 논의가 된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가 주목된다.

② 식약처, K-화장품 최대 수출국 중국과 양자 협력회의 개최

중국 정부의 안전성 강화 규제에 따른 국내 업계 어려움 해소와 중국 수출 확대 지원 중점 모색

K-화장품의 안정적인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의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가 개최된다.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8월 자국 내 화장품 시장에 새로운 규제인 화장품 안전성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방법을 통해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내 화장품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의 제도 변화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정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양국 간 규제에 대한 신뢰 기반의 무역환경 조성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화장품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4억 9,0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미국으로 19억 달러, 3위는 일본 10억 4,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번 협력 회의를 통해 식약처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 제도 등 강화된 규제에 우리 업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 간소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 화장품의 규제 관련 최신 현황에 대해 중국 규제기관과 소통하는 등 향후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중국을 방문한 식약처는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와의 간담회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 수출 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안정적인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K-화장품이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2024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수출 3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중국 수출에 있어서는 업계의 중국 규제 심사 부담 확대 및 현지 브랜드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서 여전히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라며,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품질'로 인정받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과의 규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수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③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3주간 72% 업체 참여

아직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세관에서 개별 점검

많은 관심 속에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9일 관세청은 제도가 시행된 지 3주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해 신고 수리된 업체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용철 과장은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 및 치유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은 줄이고자 도입됐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는 주요 8개 분야로 정리하되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중복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는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는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 주요 8개 분야

- ① 권리사용료, ② 생산지원, ③ 수수료·중개료, ④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 ⑤ 용기·포장비용, ⑥ 사후귀속이익, ⑦ 간접지급금액, ⑧ 특수관계자 거래)

4 관세청·KOTRA 맞손 잡고 중소기업 미 관세 대응 지원

양 기관 MOU 체결 통해 관세관·무역관 협력망 신설, 관세·규제 정보 신속 전파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과 KOTRA가 손잡았다.

관세청은 9월 23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는 양 기관 관세관·해외무역관을 통한 해외 정보 수집·전파, 설명회 세미나 등 국내 정보 제공, 지역 경제 특성 고려한 지원책·기업 지원 콘텐츠 발굴 등이다. 양 기관은 먼저 관세청 관세관과 KOTRA 해외무역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FTA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최신 통상정책, 대체 시장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더불어 관세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KOTRA 12개 지방지원본부 간 협력망도 연계해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지원 콘텐츠를 함께 발굴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KOTRA와의 국내외 네트워크 협업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품목별 관세 확대로 인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KOTRA는 정부의 관세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수출기업 관세애로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

수입식품 검사명령, 베트남 7개 제조업소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 신규 지정

9월 30일부터 국내 반입 전 세균 수 검사 결과 적합 시 수입신고 허용

베트남산 일부 과·채가공품에 대한 수입자 사전 안전입증제도인 검사명령을 앞두고 있어 국내 수입업체들의 주의를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신규 지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채가공품은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하거나 여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식품이다.

식약처는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세균 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베트남 과·채가공품 검사명령 기간은 올해 9월 30일부터 내년 9월 29일까지 1년이며 검사명령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을 경우 검사명령은 해제된다. 2012년부터 시행된 검사명령을 통해 지금까지 총 27개국 4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했으며, 현재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검사명령 대상 베트남 제조업소>

번호	업체 명
1	LEE&KIM COMPANY LIMITED
2	DUNG DAT AGRICULTUR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 LTD
3	YEN LINH PRIVATE ENTERPRISE
4	MINH KHOI TRADING IMPORT EXPORT CORPORATION
5	HANOI GREEN FOODS CO., LTD
6	ATL GLOBAL COMPANY LIMITED
7	AMEI VIETNAM JOINT STOCK COMPANY